남성숙 칼럼

본사 부회장

'한국은 집단 자살사회'

1960년대 표어는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는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아이를 적게 낳자고 권고하고 있다. 1970년대도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 안정''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도 '한 가정 한 아이 사랑가득 건강가득''낳을 생각하기 전에 키울 생각 먼저하자'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로 자녀 하나 낳기를 권하고 있다. 1990년대는 '선생님 !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하다가 2000년대 와서 인구절벽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로 제발 아기 좀 더 낳자고 사정하기 시작한다.

저출산, 고령화를 여러해전부터 걱정했지만 막상 국내 거주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인구절벽이 실감난다. 외국인들 눈에도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큰 걱정거리다. 크리스틴 라카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저출산 한국을 '집단 자살사회'로 규정했다. 무시무시한 경고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7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 줄었다. 총인구 감소는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2019년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해도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 이르렀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총인구가 2050년 4천736만명, 2060년 4천262만명, 2070년 3천76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약 600년 후에는 마지막 한국인이 사망하고 한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정도 한가한 소리인지 모른다. 이런 전개는 현재 출산율에 근거한 것이라 그 시기가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 통계청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0.81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 같다.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2.1명은 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인구절벽은 지방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통계청의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남·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21만3천명이 광주로 들어오고, 광주에서 21만9천명이 서울·경기 등지로 떠났다. 광주 인구 6천명(순 이동 인구)이 줄었다. 전남은 지난해 22만4천명이 전입하고 22만8천명이 전출해 4천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대 인구이동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광주의 경우 2천600여명, 전남은 무려 1만명에 가까운 9천300여명이 타 지역으로 갔다.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다.

민선 8기 광주·전남 지방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과 함께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특화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특단의 청년인구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잘알다시피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작년만 해도 2%대로 추정되던 잠재 성장률이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2044년에 0%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난 17년간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다.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거의 없었다. 출산율을 높이는데에만 초점을 맞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의 결과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집값 폭등, 과도한 사교육비, 취업난, 양극화 등 사회 모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구정책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와 주택, 교육, 복지의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전체 직장 근로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해도 대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활용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공동 또는 산업단지별로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득이 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과 돌봄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결혼과 출산을 머뭇거리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팍팍한 삶과 직결되는 집값 폭등, 양극화, 계층 사다리 실종, 과도한 사교육비, 취업난 등을 원인으로 얘기한다. 현재의 생활이 넉넉지 못하고 여건이 녹록지 않아 엄두를 못낸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인구증가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 대책을 국회, 민간부문과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대책이 만들어 지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2030~2040년에 인구지진이 발생한다. 그동안 잘못된 처방전으로 비싼 약값을 치르고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 처방부터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멸종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부터 인구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청년칼럼

백 준 희

에듀테인먼트 퍼니 대표

광주 청년·청소년 유익한 정보 어디에?

지역에서 청년·청소년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청년으로써, 국가 및 지방 청년정책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얻나요?" "혹시 청년혜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활동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홈페이지, 블로그, SNS, 유튜브 등 정보는 너무나 많게 차고 넘친다. 하지만 이 많은 내용들이 올바른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올바른 정보를 보는 눈을 높이고, 자신에 맞는 정보를 찾기 위해 광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플랫폼, 청소년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이다.

여기에는 광주시에서 운영되는 청년정책이 한자리에 사용자 중심으로 정보가 구축돼 있는 광주대표 청년정책 플랫폼이다. 청년소통,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공간, 청년정책으로 구성돼 있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및 지원되는 정책이 분야별로 정리돼 있다.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을 찾고 검색할 수 있고, 청년정책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광주청년현황(인구, 혼인·출산, 가구/주택, 일자리, 소득 등)이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본 플랫폼에는 광주 청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청년정책도 제안 할 수 있고, 광주 곳곳에 청년들의 활동 공간들도 소개돼 있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광주 도시를 만들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플랫폼이다.

두 번째로는 광주청소년활동포털 '다잇다'이다.

'다잇다'는 사람과 사람을 잇다라는 의미로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가 한자리에 다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광주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 및 정책정보를 안내하고자 운영되는 대표 청소년정보 플랫폼이다.

광주지역 청소년활동시설,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운영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가 유형에 따라 분류, 검색 후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구축돼 있다. 청소년정책 및 법률, 연구자료, 통계, 교육, 뉴스, 공모사업 등은 청소년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활동가에게도 유용한 정보들이 한자리에 정리돼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활동, 교육, 문화체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단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유공간으로 분류돼 청소년이면 누구나 살고 있는 내 마을공간에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생활 플랫폼이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정보를 습득한다. 이번에 소개한 광주청년·청소년 정보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각자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고, 활동공간 정보 및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 지역 청년·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는 정보제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투고

마약사범 근절 안전한 사회 실현하자

최근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 증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마약류 범죄 확산 추세에 있다. 마약범죄가 연령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의 일정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마약류 사범은 지난 6월까지 5만2천449명을 검거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등 유통행위, 인터넷(다크웹. SNS), 가상자산을 활용한 광고, 유통행위,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이다.

특히 유흥주점에서 이뤄지는 마약 유통과 투약 상황이 더 심각하는 등 유흥주점 일대가 마약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번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종업원과 손님 2명이 숨지고 이와 관련한 유통책 등 4명이 추가로 구속되기도 했다. 신임 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약 척결을 2호 지시로 하달하는 등 소통의지를 밝혔듯이 마약사범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

한국의 마약법에서 정의된 앵속·아편·코카엽, 여기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들에 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들이 속하는 것을 함유하는 것 등은 마약범죄로써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신경세포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고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중추신경흥분제들은 뇌간의 중앙부위에 있는 망상체에서 말초신경으로 부터 노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증가시키는 등 크나큰 해악을 가지고 와 본인은 물론 중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의 어두운 그림자 마약의 덫에서 헤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전국민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사회실현을 위해 이바지 하고 마약의 덫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자수하기를 바란다. 특히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도 동참해 마약사범 등 관련 알거나 보게되면 즉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社 說

尹정부 농협·수협 전남 이전 로드맵 내놔야

윤석열 정부 100일이 됐어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과 식량안보 위기에 따라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생명·금융 융복합 허브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농협·수협중앙회의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진척이 없어 애태우는 모습이다.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 본격 논의에 나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 상 농협·수협중앙회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서울시로 규정된 주 사무소에 관한 법령과 정관 변경도 선행돼야 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월 당시 윤 당선인에게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면서 농협·수협중앙회 이전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다. 전남이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자 유관 공공기관 집적 지역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또 특화산업과 연계, 성장동력 확보·균형발전 실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물론 정치권도 힘을 모아 비교우위 및 시너지 극대화 등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중요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전남의 역점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하겠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 역시 달궈지고 있다. 국책은행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산시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은행을 놓고 대구·대전시가 경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금융공기관에선 산림조합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이행돼야 한다. 농협·수협중앙회는 반드시 전남으로 옮겨와야 한다. 골고루 잘 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새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학생 강의 선택권 침해한 조선대 학사행정

조선대학교가 2022년 2학기부터 80명이 되지 않는 학년의 학과 수업을 모두 1개 합반으로 변경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 수렴이 없었고,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일방 통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학과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해 불만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마저 제기한다.

기존에 주·야간으로 나뉘었던 전공 수업 일부가 야간 합반으로 개설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평일 저녁에 하던 아르바이트도 이제는 그만둬야 할 판이라고 토로한다. 등록금 준비를 위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활동에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됐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 상당한 여려움에 봉착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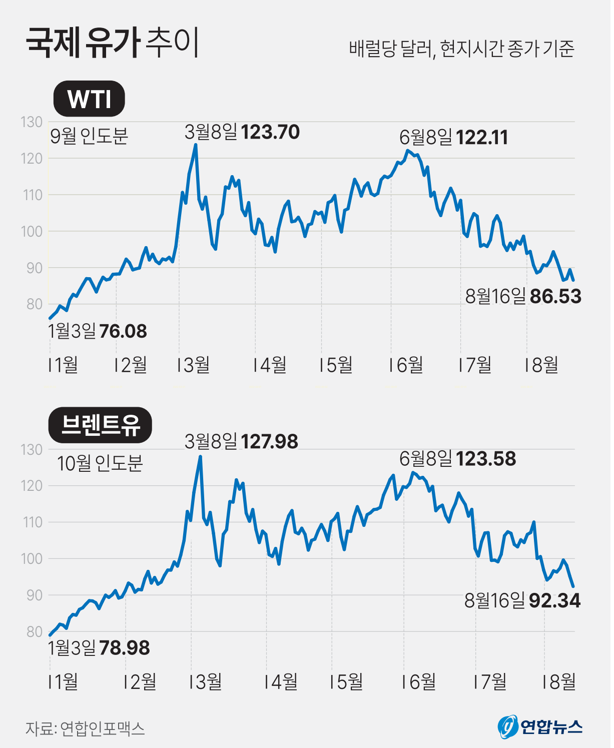
복수전공자 또한 제 때에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수업 선택의 폭이 좁아져 학부별 강의 시간이 겹치면 대안이 없다는 호소다. 학교를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강의 방식이 대면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1개 합반으로 운영 시 수강 인원이 늘어나고 밀집도가 심화되는 때문이다. 아울러 야간 수업 시간에 맞춰 등교하면 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 교학팀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 이용도 불가능해진다.

학생들은 본 수강신청이 시작되기 전, 교무처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다. 조선대는 "현재까지 합반 과정에서 재학생이 주간에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야간으로 개설한 학과와 과목이 있다"면서도 "내년부터 수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수요도 조사하지 않은 강압 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충분히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학교와 교수들의 편의대로 사실상 수업을 축소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명백한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재학생의 절박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조선대의 독선적 학사 행정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그래픽 뉴스

국제유가 하락세, 우크라전쟁 한 달 전보다도 더 떨어져



국제 유가는 16일(현지시간) 글로벌 침체 우려와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에 힘입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3.2%(2.88달러) 떨어진 86.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전인 1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3% 이상 급락한 배럴당 92.34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 2월10일 이후 최저가로 마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전날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 이어 이날 미국에서는 주택건설 시장 침체를 시사하는 통계가 나와 침체 공포를 더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9.6% 급감한 145만 건(연율)으로 시장 전망치 153만 건을 하회했고, 향후 주택시장 흐름의 가늠자인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국제 금값은 미 달러화와 10년물 미 국채의 강세 속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5%(8.40달러) 내린 1천789.7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 정치부 650-2030 / 경제부 650-2050 / 사회부 650-2040 / 문체부 650-2065 / 지역특집부 650-2060 / 사진부 650-2080 / 논설실 650-2006 / TV본부 650-2009 /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 광고국 650-2072 / 경영지원국 650-2010 / 기획사업국 650-2079 /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 편집국 650-2017 /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